

잇단 풍력발전기 꺾임 사고… 제주는 안전한가

2000년 시작 지난해까지 25개 지구 조성 146기 가동 행원·신창 등 대부분 도로 인접해 2차사고 우려 상존도 “매년 정기 안전점검용역 통해 민간업체 권고조치”

전국적으로 2016년 3월 강원도 태백 소재 풍력단지에서 풍력발전기 1기가 전도(붕괴)된 이래 잠잠했던 발전기 지지대(타워) 꺾임 사고가 지난해 4월 전남 화순에 이어 올해 2월 강원 영덕에서도 발생했다. 이에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 제주도에 산재한 풍력발전기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주지역 풍력발전기 설치 장소가 대체적으로 해안도로변에 위치한 데다, 20년가량 노후화된 발전기도 적잖아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0일 소방청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2일 오후 4시 40분쯤 영덕풍력

발전단지 발전기 1기가 꺾이면서 도로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4월 전남 회성군 야산에서 발생한 대형 풍력발전기 꺾임 사고 원인은 제조 결함으로 나왔다. 이 같은 사고는 강풍이나 극한 풍속뿐 아니라 노후 설비, 구조적 피로 등의 복합원인이 작용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의하면 도내 설치·가동 중인 풍력발전단지 규모는 25지구·146기에 이른다. 풍력발전기는 제주시 구좌읍·한림읍·한경면을 비롯해 서귀포시 성산읍·남원읍·표선면 등 육·해상에 분포해 있다.

사업 개시 연도별로는 2000년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해안로 일대를 시작으로 2009년까지 10개년간 6개 지구가 신설됐다. 이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4개 지구가 추가됐고, 2020년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해역 등 4개 지구가 더 보태졌다. 현재 풍력발전기가 설치·운영된 지 20년이 넘는 곳은 구좌읍 동복·월정리와 한경면 신창리 등 4개 지구로 파악됐다. 설계수명 20년이 넘은 발전기에 대한 기동 중단도 최근 이뤄지고 있다.

특히 제주에 산재한 풍력발전기 가운데 육상에 설치된 발전기는 대체적으로 해안도로와 인접해 있는데다, 차량 통행이 잦아 2차사고 우려가 상존하는 곳이다. 제주시 구좌읍 김녕·행원리를 비롯해 한경면 신창리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풍력발전기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민간사업체에 권고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올해도 용역비 1억원을 투입해 하반기에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용역 결과상의 큰 안전문제는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정기적인 서류 및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정적 조치(제18조) 및 조치명령(제19조), 풍력발전지구의 지정 및 취소(제20조) 등을 할 수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만 풍력발전기 안전점검을 규정한 조례를 갖추고 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2026 학교폭력 예방 대책 수립·시행

도교육청, 예방부터 사후 지원까지 통합 관리

언어폭력 증가와 학교폭력 피해의 저연령화 추세에 대응해 제주도교육청이 올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대책을 마련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은 ‘2026학년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3대 핵심과제로 학교 자체 예방 역량 강화, 일상 속 회화와 관계 회복,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 등을 설정하고 학교폭력을 예방부터 사후 지원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학교 현장의 자체적 예방 능력

강화를 위해 신학기 초 피해 학생을 돕는 ‘방어행동 실천 교육’을 집중 실시하고, 바른 언어 사용 교육과 디피아크 등 신종 폭력에 대응하는 맞춤형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 선도 학교를 기준 10개교에서 20개교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갈등 초기 교직원 상담 체계인 ‘현장-ON’, 초등 1~2학년 경미 사안을 대상으로 한 관계회복 숙련제 ‘숙려-ON’, 피해 학생 요청 시 관계 조정을 지원하는 ‘조정-ON’을 본격 가동해 학교 현장의 회복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김채현기자

‘수업 중 스마트폰 제한’ 공론화 마무리

31.6% “수업 방해 경험”… 82.2% “정책에 공감”

도교육청, 권고안 마련 신학기 전 현장 안내 예정

오는 3월부터 수업 중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이 합리적인 지침 마련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최종 권고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10일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가 지난해 10~11월 사이 실시한 사전 여론조사 결과 스마트폰기는 이미 교내 수업 과정 전반에 상당 부분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초등 4학년 이상 학생과 학부모, 교사, 일반 도민 등 1105명이 참여한 이번 조사에서 수업 중 교사 허락 하에 사용하는 기기는 휴대전화(65.9%)가 가장 많았으며, 태블릿·크롬북(52.0%), 노트북(45.5%) 순으로 집계됐다.

활용도가 높은 만큼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확인됐다. 응답자의 31.6%가 휴대전화로 인한 수업 방해를 경험했다고 답해, 학습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 시행에 대한 인지율은 고등학생이 80% 수준으로 가장 높았으며, 학부모는 60% 내외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봄을 재촉하는 비 매서웠던 한파가 물러나고 비가 내린 10일 제주시 도두동 해안을 찾은 관광객들이 우산을 쓰고 걸어가고 있다. 강희민기자

마을교육공동체 선도학교 21개교로 확대

도교육청, 교육활동가 양성·현장 지원 강화

제주도 교육청이 2026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발표했다.

제주도 교육청은 학교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보호자, 시민사회가 협력하는 교육생태계인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

책들을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선도학교 확대, 마을교육공동체 운영단체 다양화, 마을교육활동가 양성, 현장 지원 강화 등을 4대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우선 학교-온(溫)마을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를 위해 선도학교를 17개교에서 21개교(초 15·중 4·고 2)로 확대하고 학교당 800만원, 총 1억 6800만원을 지원한다. 또 마을교육활동가 양성 과정을 기본과 심화로 구분해 운영하고, 심화과정은 원탁토론과 공동연수 중심으로 구성해 활동가들이 지역 교육을 기획하는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채현기자

축 임 제주중앙고등학교총동창회장



미래를 생각하는 중앙인이 되자!

제주중앙고등학교총동창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박홍주(28회)

서초등학교(17회)



제주중앙고등학교총동창회 회원일동

축 임

제10대 일도초등학교총동문회 출범



총동문회장 양영석

여성부회장 강순자 재무이사 김정희
제무이사 김정희 조직기획이사 조선희
체육이사 정경철 문화이사 임성찬



수석부회장 고삼권

취임을 축하드리며, 모교 및 총동문회 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길 기대합니다

일도초등학교총동문회 회원일동